

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책과제

국내 북한이탈주민은 계속 증가, 인도주의와 통일 대비 차원에서 지원 필요

- 국내 북한이탈주민 거주 규모 증가에 따라 지원정책의 개선과 확대 요망
 - 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급증, 2010년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 진입
 - 2014년 6월 누계 인원이 26,854명에 달하였으며,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다양한 문제 산재
-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인도주의는 물론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중요
 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 자체로도 중요
 - 그러나, 통일 준비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잠재적 역량 활용과 통일 이후 남북통합 대비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요구

국내 북한이탈주민은 계속 증가 전망. 인도주의 및 통일대비 차원에서 지속적 지원 필요

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 현황

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및 한국 정착과정에서 고난과 혼란을 경험

-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여성이 다수이며, 전체의 약 65%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
 -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18,776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%
 -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7,041명(전체의 28.5%)으로 전국 최대, 서울(26.9%), 인천(9.3%) 순
 - 90년대에는 단독입국, 이후에는 가족입국이 주요 입국 형태였으나, 수년전부터 앞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선으로 제3국 혹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뒤따라 입국하는 양상 전개
-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탈북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겪고, 한국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와 고충에 직면
 - 탈북과정의 정신적·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 초래
 -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가치관 및 문화의 차이,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절망감 경험
 - 취업 및 사회응응에 실패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행을 선택, 또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거나 범죄자로 전락

중앙정부와 지자체, 민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

-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은 '인도주의'와 '통일대비'
 -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을 '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'와 '통일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의 일환'으로 설정
 - 1997년 제정한 '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' 등에 따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적응센터를 비롯한 여러 민간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
-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정착금 지급 등 정착과 자립을 위한 시책사업을 전개
 - 하나원 수료 이후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정착금, 주거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
 - 또한 직업훈련 및 고용알선과 취업장려금, 고용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
 - 아울러, 북한이탈주민 특례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의료급여, 국민연금 지급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 제공

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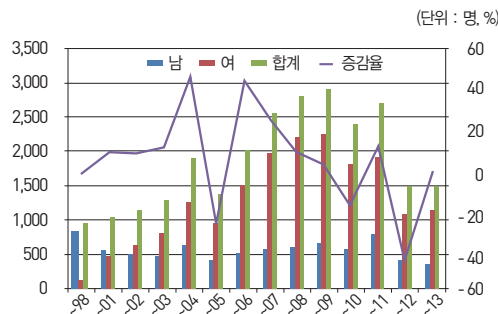
‘지원의 역설’ :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의존적·소극적 자세에 안주

- ‘신속한 정책’을 명분으로 한 현재의 각종 지원방식은 오·남용 가능성 대두
 - 현금성·현물성 지원의 관리 미흡과 편법·탈법 관행에 대한 ‘학습’으로 불법 수급 문제 대두
 - 적성과 능력을 배제한 채 ‘조기 취업’만을 강조하는 취업지원책은 오히려 ‘안정적 정착’에 역효과
- 북한이탈주민 스스로도 ‘피보호 대상’이라는 사고에 갇혀 의존적·소극적 자세 일관
 - 저임금 일자리 취업보다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이 금전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공식적 노동시장 진입을 기피
 - 즉, 일부는 비공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급여와 각종 장려금 등을 편법적으로 수급

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 공급자 간 원활한 연계와 거버넌스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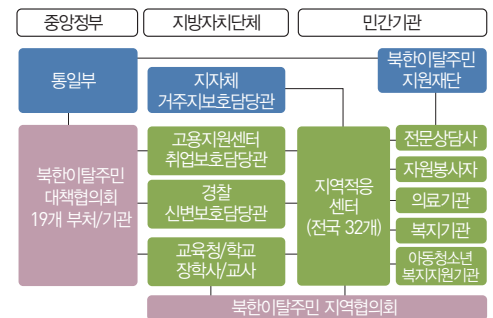
-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상 통일부에의 역할 편중으로 지자체 및 민간의 입지 협소
 -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남북관계 관리 및 한반도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부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나,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후 지역사회 편입과 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, 민간사회의 역할과 역량 강화도 필요

■ 북한이탈주민 규모 추이



자료 : 통일부(2013), 『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』

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



‘위하는’ 정책에서 ‘함께하는’ 정책으로 전환.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과 참여 확대로 통일역량 확충

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

북한이탈주민을 ‘위하는’ 정책에서 ‘함께하는’ 정책으로 전환

- 북한이탈주민을 ‘보호·지원 대상’에서 ‘함께 하는 파트너’로 새롭게 인식
 - 북한이탈주민이 자립과 자조, 책임과 의무, 규율과 신뢰 등 한국사회의 가치를 체득토록 독려
 -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소정의 특혜를 제공하되 그 이후부터는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확립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에게 명확하게 주지
 -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착 촉구보다는 배려하고 기다려 주는 지원정책을 추진

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통일역량 확충

-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지역정착을 책임지는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 강화
 -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관리·감독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내 일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
 - 지자체가 기존에 구축한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
 - 민간단체의 역량 개발 및 육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보다 다양한 기능과 역할 부여
- 통일에 대비한 공동체 선진화와 통일역량 확충
 -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등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 제고